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배 규 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상적 차원에 머물던 통일논의가 성큼 현실적 관심사로 다가왔다. 정치적, 군사적 시각에서 “완전한 분단” 또는 “완전한 통일” 사이를 오가던 체제론적 시각을 탈피하여, 이제는 끊어졌던 남북한간 관계를 서서히 복원해 나가는 관계론적 시각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통일은 체제간의 일회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구성원들의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머나먼 과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통일의 과정인 동시에 통일 이후의 과제가 되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하여, 그 기반과 전제조건, 그리고 남한의 준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통일(unification)이란 단순히 둘 이상의 이질적 단위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통합(integration)이란 각 부분들 간 전체성을 유지하는 상호의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과정 혹은 그 전체성의 정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이란 “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뜻한다. 이때 비로소 성원들 상호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없어질 것이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민족의 대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이란 통일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통일 이후 이루어야 할 최종단계,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인 것이다.

통일 개념은 체제론적 접근인 반면, 통합 개념은 관계론적 접근이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은 남북한이 상당기간 동안 공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체제의 단점을 수정하여 서로가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체제로 서서히 수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질적 체제의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통합 이론

산업사회 초기에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를 연구함으로써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통찰력을 보여 주었다.

맑스(Karl Marx)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관계가 소의를 야기 시키는지 분석함으로써 통합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와 일체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물질적, 감정적 요소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베버(Max Weber)는 합리적, 합법적 가치에 의하여 권위체제가 정통성을 획득하고, 관료제적 형태를 세련화 시켜 갈수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뒤르켐(Emile Durkheim)에 따르면 동질성에 기초를 둔 과거의 “기계적 연대”는 이질성에 기초를 둔 “유기적 연대”로 대체된다. 기계적 연대는 공통가치와 신념에 의한 통합으로서 전통사회의 특징인 반면, 유기적 연대는 상호의존성에 따른 통합형태로서 산업사회의 특징이다.

20세기 이후 사회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크게 보면 규범적 통합, 의사소통적 통합, 그리고 기능적 통합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적 통합이론은 문화적 기준들과 개인행위간의 일관성을 증시하는 입장에서, 사회통합 논의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규범적 통합은 문화체계 내의 중심 요소, 즉 사회의 공통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화된 요소로 제도화될 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역할담당자들 사이에 공통가치체계가 형성될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유형은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유지하는 수단은 바로 체계 내의 사회제도라고 본다.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사회학

의사소통적 통합론자들은 가치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적 수단은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본다. 사회적 합의를 유지시키는 것은 상호의존관계, 공동적 문화기반, 관습을 이루는 생활의 기준, 공동생활 등이며, 현대사회에서 전체로서의 의미와 효율성을 부여하여 사회를 결속시키고, 계속하여 합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중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민족적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대중매체에 의하여 성원들이 동원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한다. 물론 의사소통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서로 잘 이해하는 의사소통망에 속한다고 하여, 반드시 협동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통합에 중요한 필요조건임은 분명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기능적 통합이란 여러 전문화된 부문들이 사회변동 과정을 통하여 계속 존립하면서 전체 사회체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이루어지는 통합을 말한다. 기능적 통합은 어떤 인구집단이나 공동체에도 최소한의 분업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회집단 내 분화된 단위들의 활동이 전문화될수록, 각 부분들은 공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된다는 명제를 중시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단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능적 통합의 정도는 전문화된 제 부분간의 상호의존적 또는 공생적 관계가 얼마나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2.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쪽의 체제 및 삶의 양식, 그리고 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어느 정도 이질화되어 있는지 서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이한 두개의 체제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이질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제와 이념: 남북한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 및 경제체도에 있다. 정치체제는 표면상 자유민주주의의 대 인민민주주의로 구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의 이념적 균열은 남북한 분단 및 그에 따른 이질적 양 체제를 탄생시켰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고착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경제체제 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로 나누어진다. 남한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의 계획에 따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 및 산업의 국유화, 집단농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왔다.

국가의 통제 및 계층제도: 한 사회의 체제 및 이념은 개인의 생활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한에서는 개인적 자유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아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사상에 의거하여 개인적 자유가 제약된다. 교육이나 직업은 물론 거주나 여행까지도 국가의 통제아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직생활 및 학습을 통하여 집단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익힌다.

남한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대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무능력자는 철저히 도태된다. 결과적으로 성취능력에 따라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며, 계층적 지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부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노동부에 노동인력으로 등록되어 직장을 배속받으므로, 실업자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북한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어 실업이나 재해에 대한 불안도 적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데 대한 개별적 보상제도가 없으므로 일에 대한 동기화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과 가치관: 남한에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집단주의적이고 조직지향적인 인간을 만들어 왔다. 또한 남한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가치가 만연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는 이념지향적 가치가 지배적이다.

남한에서의 개인생활은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자유롭다. 그러나 자신의 여건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으므로 소비의식은 늘 빈곤함을 느끼게 된다.

북한은 철저한 조직사회이다. 개인의 소비생활까지 모두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사회가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에도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2) 통합기반의 취약성

흔히들 남북한은 단일민족 국가이고, 언어는 물론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바탕이 동일하므로 통일만 되면

사회통합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별개의 정치, 경제, 사회체 아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분단상황이 종식되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을 지닌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의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상대방을 멸시하게 될지 모른다. 남한인들에게 북한인들은 “교조적이고, 답답하며,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북한인들에게 남한인들은 “남비가 심하고, 부도덕하며,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인” 존재로 보일 것이다.

남북한의 상이한 가치관이 만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물질적 결핍감이 남한의 물질주의와 결합되면, 이는 물질만능주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권위주의 및 허약한 시민정신이 북한의 신분제적인 계층의식 및 봉건적 관료주의와 만날 때, 더욱 반민주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한 채 정치적 통일만을 추구한다면, 다행히 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통합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통일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남한에서는 민주화가 진전되어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의 폭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체제 하에 있다. 남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이후 발전되기 시작하여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은 냉전상태를 지속해 왔을 뿐 아니라, 동족상쟁의 쓰라린 상처를 지니고 있다. 통일된 독일이 사회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은 동서독 보다 인구나 국토 등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적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통합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더욱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북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또 다른 측면에서 통합에 적신호를 보여 준다.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이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남북한을 합하여 전후세대가 전체인구의 2/3 이상인 것이다. 이것은 남북 인구의 대다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의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민족적 공통성의 기반이 상당부분 훼손되고, 이질화의 정도가 심해진 남북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통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격차는 소의를 야기 시키는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물질적 궁핍을 해소하는 물론,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측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어느 쪽도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인당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단순한 상호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 남북 양측은 서로가 상대방의 경제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economic flexibility)을 높여 나가야 한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체제는 상호 너무나 이질적이므로 하나의 경제단위로 합쳐질 수 없으며, 당장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서독의 경우, 쌍방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유사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통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적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교역의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경제제도 및 체제 자체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제통합 논의가 경우에 따라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시장경제로의 흡수통합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회주의 체제에 강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남북한은 과거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몰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크게 뒤떨어졌음을 상기고, 경제체제의 우월성 논의보다는 현실적 접근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양측에 모두 정치적 관용성 (political tolerance)의 정도가 높아져야 한다. 정치적 관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은 체제의 정통성이므로 양측에 모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은 경직되며, 경직된 정치체제는 결코 다른 정치체제와 융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관료체제가 정착될수록 남북한의 사회통합 정도는 높아질 수 있다.

정치적 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조차 없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도 참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통일을 고려할 때 어떠한 정치체제를 지향해 나가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함께 통합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통일은 재일성(uni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통일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는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여 걸쳐 별개의 상이한 사회변동 과정을 겪어왔으므로 각기 독자적인 사회구조와 제도를 갖고 있다. 반드시 어느 쪽의 제도가 좋고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의 환경에 맞추어 형성된 것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모든 사회제도가 동질화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 남북한의 문화는 이념과 제도, 가치와 행위양식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그 체제정립을 위하여 사상과 이념에 대한 선전계몽에 앞장서 왔다. 남한에서는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분히 물질주의적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구조를 서로 인정하면서 합의된 미래상에 따라 그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입각하여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 생활양식은 결혼을 통해서나 직장동료로서 함께 일할 때, 또는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공동상황에서의 생활 등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 상호작용을 지속해 나갈 때 형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지역의 여행 및 통행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북한에서처럼 주거 및 여행의 허가제를 실시하는 한 공통적 생활양식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 주민들이 제3의 지역에서 국제회의 기회 등을 통하여 접촉하거나, 남북한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통합을 위한 통일의 과정과 준비

(1) 통일의 과정

남북한이 통일 이후 큰 무리 없이 사회통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방법과 속도가 중요하다. 남북한 통일의 시나리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것에서부터 무력적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즉,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주로 독일의 경험과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은 남북한이 함께 몰락하는 위험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한간 동질성의 회복을 우선적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인적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때,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줄이면서 서서히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남북한간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교류는 경제협력일 것이다. 이것은 양측에 모두 도움될 것이며, 북한은 점차적으로 사회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남북한 교류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접촉 확대, 교신, 상호방문 등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다른 생활환경 때문에 크게 달라졌던 남북한간 주민들의 의식세계도 점차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모과정을 볼 때,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에 가깝게 변하는 것의 미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실업의 문제는 북한지역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동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남한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점차적으로 수렴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로서 남북한 각 지역이 단순한 통일의 열망을 넘어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 접촉이나 공동생활이 없더라도 상호보완적 산업발달이나 분업을 통하여 실질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의존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전이라도 경제적 협력관계나 경제권의 통합이 진척될 수 있다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남북한 체제가 갖는 각각의 이점을 통합해 줄 새로운 이념이나 체제에 관한 논의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등 새로운 체제모형이 제시된 바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있다. 남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을 외딴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자세로 통일한국의 체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이후 체제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와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개방의 효과들이 사회 내부에 서서히 파급되어야 한

다. 그 결과 사회이념도 주체사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집단주의적 이념으로부터 개인주의적 이념으로, 혁명적 자발주의로부터 현실적 물질주의로 서서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인들은 남한인들에 비해 경쟁력과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경제에서 개인적 적응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들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을 전문경영자나 기술자로 훈련시켜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통일한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인들의 경제적 적응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취업, 승진, 또는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거나, 남북한인의 지역적 교차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 북한인으로 하여금 남한인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가치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 수단인 바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망은 대면적 접촉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가치합의의 폭을 넓히는 통로가 되며, 각종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최소한 공통의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만이라도 있다면, 매체를 통한 간접적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한 서로가 상대방의 인쇄 및 방송/영상매체에 자유롭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왕래 이전에 방송교류의 물꼬만이라도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의 준비

사회통합의 핵심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있다. 하나의 민족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남한사회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준비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개개인 모두가 인격을 지닌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에서만 모든 성원을 포괄하는 튼튼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을 줄여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의 공산주의 통제경제를 시장경제에 가깝게 바꾸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남한의 시장경제 또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북관계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최근의 정책기조는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끌려가기보다는 현실적 바탕에 근거하여 그물같이 얽힌 치밀한 각종 협약들을 체결하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대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바로 통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통일을 추구하기에 앞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의지할 수 있으며, 남한은 생산성 높고 정확한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자원 및 천연적 조건에 따라 남북한간에 효율적인 분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가시적 조치들이 뒤따르고 있긴 하지만, 서로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므로 각종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개방의 폭을 조금씩 넓히고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물자 교류, 통상, 통신, 인적 교류, 과학기술 교류 등이 중요한 말할 것도 없지만,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사이버 교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 내지 협력관계가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각급 학교를 통하여 또는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를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어떻게든지 남북한 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